

# 올 겨울 미세먼지 더욱 심해진다

### 中 경기둔화로 미세먼지 저감 목표치 대폭 낮춰 28개 중점도시 저감목표 4%...당초 比 1.5% 낮아

29일 오전 미세먼지가 많아 출근길에 특별히 유의해야겠다는 예보가 나왔다. 미세먼지의 철이 돌아온 것이다. 그런데 올해 겨울 미세먼지는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중국이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경기둔화를 막기 위해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대폭 낮추었기 때문이다.

중국을 미중 무역전쟁 발생 전까지 겨울철 석탄 난방을 중단시키고 석탄을 원료로 하는 공장 가동을 중단시키는 등 획기적인 대책으로 미세먼지를 크게 줄였었다. 그러나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 경제가 급격히 둔화하자 중국은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중국의 미세먼지는 전년 대비 급속히 증가했다. 이번 아니라 올해 미세먼지 저감 목표도 크게 낮춰 잡아 올 겨울은 어느 때보다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할 전망이다. 베이징 등 중국 동북부 28개 중점도시의 올해 미세먼지 저감목표는 4%다. 이는 당초 목표보다 1.5%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지난해 미세먼지 저감목표는 3%였다. 그럼에도 지난해 베이징-톈진-허베이 지역의 미세먼지는 6.5% 증가했다. 올해 목표 4%

는 지난해보다 높지만 지난해 증가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것이다. 이에 따라 올겨울 중국의 미세먼지는 어느 때보다 더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국의 미세먼지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29일 미세먼지가 전 권역 나쁨 수준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과학원은 미세먼지는 때로는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올라간다고 덧붙였다.

뉴스1

# 인권위 “경찰관, 정복 입어도 불심검문시 신분증 보여줘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할 때 정복을 입고 있더라도 신분증을 보여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경찰관은 불심검문 시 정복을 착용했다 라도 ‘경찰관집무집행법’에 따라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업무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의 이와 같은 판단은 대법원의 해석과는 다른 방향이다. 앞서 2004년과 2014년 대법원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이라면 신분증

을 제시하지 않아도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면 검문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었다. 경찰관집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할 때 공무원 증인 신분증을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야 한다. 또 질문하는 목적과 이유도 설명해야한다고 법에서 규정했다. 인권위는 “경찰관집무집행법의 입법 취지는 만약 불법적인 경찰 활동일 경우 책임을 물을 대상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 광주·전남 올 가을 첫 미세먼지 주의보

황사 영향으로 광주와 전남에 올 가을 첫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됐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과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29일 오후 1시를 기해 광주와 전남 동부권에 미세먼지(PM10·1000분의 10mm보다 작은 먼지) 주의보를 발효했다. 전남 서부권엔 1시간 앞선 낮 12시 주의보가 발효됐다. 오후 1시 기준 PM10 시간평균 농도는 m당 광주 170㎍(마이크로그램), 전남 179㎍을 기록했다. 기상청은 중국 북부지방과 고비사막 부근에서 발원한 황사가 기압골의 후면을 따라 등진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이날 오후까지 황사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노약자와 환자, 유아는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자동차보다 대중교통을 이용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된 것은 지난 6월12일 이후 4개월여만에, 전남은 5월2일 이후 5개월여만이다.



두달 앞으로 다가온 2020년 2019년이 두 달 남은 2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한 인쇄소에서 관계자가 새롭게 인쇄된 2020년 경자년(庚子年) 달력을 확인하고 있다.

## ‘연간 5억건’ 종이문서 없앤다...年6천억 비용절감

정부가 민원 처리나 각종 고지서에 이용되는 종이 문서를 없애면, 연간 종이고지서 제작과 발송 비용 1000억원 규모의 비용절감을 비롯해 매년 6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등이 함께 했다. 이번 디지털 정부혁신 계획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구상이다. 정부는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증명서와 우편물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분증도 스마트폰에 안전하게 담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스마트폰(전자지갑)을 활용해 각종 증명서를 전자적으로 발급·보관하고 관공서 은행 등에 방문 없이 제출하도록 한다. 올해 주민등록등·초본에 한정됐던 것을 내년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100종으로 확대하고 더 나아가 오는 2021년에는 인감증명서 등 300종을 전자증명서로 이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더 나아가 위·변조 및 도용 우려가 있는 기존 플라스틱 카드보다 안정성·편의성이 높은 스마트폰 기반 디지털 신분증을 도입한다. 현재 학생증, 공무원증 등 이용 대상과 목적이 명확한 분야부터 안전성 점검 후 단계적으로 확대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각 종 고지서·안내문을 온라인으로 받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디지털 고지 및 수납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행안부는 올 7월부터 지방세의 디지털 고지·납부를 시행하고 있는데, 관련 시스템을 확장시켜 오는 2021년까지 전 분야로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종이문서를 없애 나가는 것을 통해 많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종이고지서 건수는 국세가 1100만건, 지방세가 1억9500만건, 4대보험이 1억2500만건, 자동차검사안내가 2300만건에 달했다.

### 이슈 판결

## 미성년 포함 수습명과 성관계 뒤 동영상 6천개 유포 40대, 2심 중형

### 서울고법, 일부 혐의 무죄...징역10년→9년 선고

보컬강사를 사칭하며 10대 청소년들과의 성관계를 촬영해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판매한 4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29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9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지난 5월 징역 10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금지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 중 일부 범행이 피고인이 구속된 기간 중에 한 부분이 있어 객관적으로 범죄를 저지러 수 없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 또는 청소년과 합의를 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지만, 이 사건 성격상 양형에서 크게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크게 저해할 뿐더러 음란물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아동·청소년에 대한 왜곡된 성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강화할 수 있다”며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청소년이 처벌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했지만 항소심에서 감형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휴대 폰 채팅앱을 통해 만난 25명의 청소년들과 성관계를 맺고 그 장면의 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을 보컬강사나 기획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고 그 장면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피해자들 앞에서 바로 삭제해 안심시켰다. 그러나 A씨는 복원 앱을 통해 사진과 동영상을 복구한 뒤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은요... 자태치로공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인해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혜택이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 콜센터 129 | 고객센터 1577-1000